

독신의 선택과 노후준비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Study on the Single Life, the Preparation for Old Age and Policy Implication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양정선*

Division of Policy Research,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Fellow Yang, Jungs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정책적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people prepare for old age by looking at financial statements from single-person households in Gyeonggi province; th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are considered. The subjects were members of 600 households who were aged 26 to 44 years old and not married.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and dichotomous logistic regression using SPSS WIN 12.0.

Respondents pointed out that financial problems are the greatest challenges for those facing old age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ey said that a stable job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secure living. About 57% of household residents responded that they have prepared for retirement, and a majority of them said they hoped to spend their elderly years with a marriage partner. The financial statements from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inferior to those from other types of households. The assets of single-person household members were less than those of other households. Only 10.5% of respondents have owned homes.

The study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those who want marriage and for those who don't want it. For those who want marriage, job-seeking support was proposed, and for the others, tax deductions and family program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proposed.

* 주저자, 교신저자: 양정선 (jsyang1120@gfwri.kr)

Key Words : 독신자(a single person), 재정상태(financial statement), 노후준비(preparation of the old age), 정책적 지원(Policy Implication)

I. 서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락하였고, 2000년대에는 최저출산 수준을 지속하게 되었다. 최저 출산과 더불어 가족의 형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201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평균 가구원수는 2.69명으로 2005년 2.88명보다 0.19명 감소하였고, 핵가족 비율은 61.6%로 2005년(65.0%)보다 3.4%감소하였으며, 단독가구인 1인가구의 비율은 23.9%로 2005년 20.0%에서 3.9%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

독신자 단독가구는 가족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원인에서도 비롯되지만 가족 구성 자체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만혼화 현상 및 일평생 동안 독신을 라이프 스타일로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 트렌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늦게 결혼하는 만혼화 현상과 독신의 선택은 오늘날의 저출산을 불러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의 하나이다. 실제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이후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데, 1999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29.07세, 여성 26.29세였던 것이 2010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8세, 여성 28.9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만혼화 현상이 가중되면서 모의 첫 자녀 출산 연령은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2010년 현재 30.1세까지 증가하였다. 결과론적으로 모의 출산 연령이 늦어지게 되면 가능한 출산 자녀수가 줄어들어 저출산 사회의 문제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들이 늦게 결혼하고, 또는 결혼하지 않은 채 독신자로 남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의 인적자본 투자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진입 자체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로 인해 고숙련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대학 졸업과 부가적인 인적자본의 투자가 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온다는 실증연구는 이미 서구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누적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이후 학력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의 영향권 내에 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대 초반 30%대에 머물러 있던 대학 진학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 80%대에서 안정화되었다. 이 중에서 2년제 전문대 진학보다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초혼 연령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진입해야 하는 노동시장은 그 문이 지나치게 좁아서 25~29세 남성의 비취업자 비율은 20% 후반 수준이며 지난 5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혼 남성의 비취업자 비율은 2008년 35.3%에 이르고 있다(김혜원, 2009).

보건복지가족부(2010)의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의하면, 30세 이상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소득부족(14.3%), 실업 및 고용불안정(13.9%)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5.9%), ‘결혼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5.7%), ‘결혼생활의 비용이 부담돼서’(7.1%)와 같은 요인들까지 고려한다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환경적 영향력이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직간접적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건은 미혼남성의

경우 고용안정(38.3%), 미혼여성은 소득안정(30.3%)으로 나타나 출산 역시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의 미혼 여성과 남성은 인적자본 투자의 증가, 취업과 고용의 불안정성, 현대사회의 결혼시장의 특수성,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만혼과 독신을 선택하게 되었고, 단독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나 현 시점의 문화적 트렌드를 해석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그들은 독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며, 새로운 소비문화를 주도하고, 구태의연한 결혼의 제도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서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아이콘처럼 묘사되고 있다. 물론 일부 소비문화를 주도하고, 소비의 특수 계층을 이루는 의견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소수 독신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골드 미스 혹은 미스터로 묘사되는 그들은 보편적 독신자를 대표하지 못한다. 그들은 독신자의 극단치를 보여주는 소수인 셈이다. 독신자 중에는 현재 독신의 상태에 있지만 결혼을 희망하면서 아직 결혼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기타 다양한(이혼, 사별 등) 사유에 의해 독신이 된 사람들,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독신자 단독가구가 현재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노인세대가 되었을 때, 극빈층을 제외하고서는 다수가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에서의 복지 서비스는 많은 부분을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가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돌봄의 서비스가 개별 가족의 단위로 가족 구성원에게 그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복지 서비스 대상은 요보호계층을 위주로 잔여적인 개념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가족복지 정책은 명시적으로 가족복지 영역으로 한정하여 제시된 내용도

없고 그 한계도 모호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복지 서비스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공공부조제도나 아동, 여성, 노인복지제도 등이 사회복지정책의 일부분으로 시행되고 있다(양옥경·이재경·김인숙·윤홍식·송다영·박영희·정순들·김유순·김신열·이은주·류미란·최명민·이선혜, 2007). 그러나 그 수혜대상이나 수혜정도는 극히 미흡하여 생활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경우, 2011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만이 수혜대상이다. 2010년 지급된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가 9만원, 부부가구가 14만4천원(보건복지부, 2011년 기초노령연금관련 보도자료)에 불과하여 2010년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 504,344원, 2인가구 858,747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또한 2010년 장기요양보험 전체 신청자 수는 622,346명이었으나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315,974명에 불과하여 반수가 조금 넘는 사람들만이 수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족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독신자가 경험하는 노후 불안감, 경제적 불안정성, 위급 상황시 대처의 어려움 등은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 숙고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또한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독신의 삶을 선택하는 독신자 단독가구의 생활모습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따른다.

이에 본 연구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독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여 현재 독립된 단독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독신자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적령기 이상의 연령, 즉 26~44세의 경기도 거주 미혼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독신 선택과 재정상태, 노후준비를 살펴 보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결혼 하지 않고 독신의 삶을 선택한 이유 중의 적지 않은 부분이 경제적인 측면과 연관이 있었으므로, 독신자의 생활실태 중 재정상태와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독신자들의 현재 생활모습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단면이며, 독신자들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마련의 기초적인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인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는 가족의 변화 방향과 더불어 개인차원에서의 선택적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독해하는 주요한 논거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 2007). 독신자의 현재 재정상태와 노후준비를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한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가족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독신 단독가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독신자들의 경제적인 상태와 행위 그리고 독신의 삶을 분석한 본 연구는 현재 그들이 살아 가고 있는 생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미래 삶

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책적 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독신자는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무배우자로서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생활하는, 즉 혼인상태에 있지 아니한 독신의 단독 가구를 뜻한다.

II.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1. 결혼관의 변화와 독신의 선택

통계청(1998, 2002, 2008)의 사회조사 중 미혼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1998년, 2002년, 2008년의 연도 별로 살펴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당위성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선택성과 결혼의 반대 성향(‘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성향은 예나 지금이나 여성이 훨씬 심하지만, 그 변화의 폭에 있어서는 남성의 변화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998년 대비 2008년 변화가 여성은 약 23% 감

〈표 1〉 결혼에 대한 태도(미혼남성과 여성)

(단위: %)

구 분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1998	남성	26.6	46.6	23	0.6	0.2	3.1
	여성	12.7	38.7	43.3	1.7	0.2	3.3
2002	남성	23.6	49.8	23.1	0.6	0.2	2.7
	여성	10	39.9	44.9	2.1	0.3	2.9
2008	남성	19.1	45.6	30	2.2	0.6	2.4
	여성	9.8	36.7	46.8	3.5	0.5	2.7

자료: 통계청(1998, 2002, 2008) 각 연도 사회조사 내용의 재구성

소한 반면 남성은 약 28% 감소하였다.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의 의견은 여성이 199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반면 남성은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여 남성의 변화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결혼이 과거에 가졌던 규범으로서의 당위성이 약화되면서 만혼화 현상과 독신 단독가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곧 저출산의

사회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물론 개인의 가치관 변화는 사회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병행된 현상이다.

결혼관의 변화와 만혼화 현상으로 인하여 독신자 단독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독가구인 1인가구 비율은 23.9%(4,142천 가구)로 2005

〈표 2〉 1인 가구 규모(1980-2010)

(단위: 천 가구, %)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 (A)	합계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1인가구 (B)	383	661	1,021	1,642	2,224	3,171	4,142
1인가구 비율 (B/A)		4.8	6.9	9.0	12.7	15.5	20.0	23.9

자료: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가구·주택 부문)

〈표 3〉 성별 1인 가구의 연령 및 혼인상태(2005, 2010)

(단위: 천 가구, %)

구 분	2005년				2010년			
	일반 가구	1인가구	1인가구		일반 가구	1인가구	1인가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합 계	15,887 (100.0)	3,171 (100.0)	1,418 (100.0)	1,753 (100.0)	17,339 (100.0)	4,142 (100.0)	1,924 (100.0)	2,218 (100.0)
20세미만	71 (0.4)	44 (1.4)	23 (1.6)	22 (1.3)	68 (0.4)	49 (1.2)	24 (1.2)	24 (1.1)
20~29세	1,318 (8.3)	679 (21.4)	362 (25.5)	317 (18.1)	1,302 (7.5)	763 (18.4)	408 (21.2)	355 (16.0)
30~39세	3,586 (22.6)	629 (19.8)	410 (28.9)	219 (12.5)	3,368 (19.4)	791 (19.1)	509 (26.5)	282 (12.7)
40~49세	4,369 (27.5)	474 (14.9)	269 (19.0)	205 (11.7)	4,432 (25.6)	628 (15.2)	381 (19.8)	247 (11.1)
50~59세	2,979 (18.8)	366 (11.5)	164 (11.6)	202 (11.5)	3,773 (21.8)	591 (14.3)	294 (15.3)	297 (13.4)
60~69세	2,111 (13.3)	430 (13.6)	106 (7.5)	324 (18.5)	2,364 (13.6)	527 (12.7)	167 (8.7)	360 (16.2)
70세이상	1,453 (9.1)	548 (17.3)	83 (5.9)	464 (26.5)	2,033 (11.7)	793 (19.1)	141 (7.3)	652 (29.4)
미혼	2,030 (12.8)	1,428 (45.0)	855 (60.3)	573 (32.7)	2,504 (14.4)	1,843 (44.5)	1,110 (57.7)	733 (33.0)
배우자있음	11,120 (70.0)	368 (11.6)	236 (16.6)	132 (7.5)	11,547 (66.6)	534 (12.9)	338 (17.6)	196 (8.8)
사별	1,832 (11.5)	1,002 (31.6)	148 (10.4)	854 (48.7)	2,021 (11.7)	1,208 (29.2)	195 (10.1)	1,013 (45.7)
이혼	904 (5.7)	373 (11.8)	180 (12.7)	193 (11.0)	1,267 (7.3)	556 (13.4)	281 (14.6)	275 (12.4)

자료: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가구·주택 부문)

년 20.0%에서 3.9%p 증가하였다(<표 2> 참조).

이러한 비율은 일본(31.2%), 영국(29.0%)과는 다소 차이가 벌어지지만, 미국(26.7%)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단독 1인가구의 연령 구성비를 살펴보면, 20대이하 19.6%, 30대 19.1%, 40대 15.2%로 나타나 40대 이하의 1인가구가 전체 1인가구의 53.9%를 점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의 많은 독신자들이 이들 1인가구의 비중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심경미(2003)는 심층 면접을 통해 여성을 비혼으로 몰아가고 이끄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가부장적 가족, 결혼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가부장적 결혼이 여성에게 부과하는 성역할에 대한 불만족, 가부장적 가족 경험으로 인한 결혼이나 남성에 대한 불신, 가부장적 결혼 배우자 선택조건들은 여성을 비혼으로 몰고가는 소극적 비혼 유인이 된다고 하였다. 반면 자기 발전이나 일에 대한 욕구,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은 여성을 비혼으로 이끄는 적극적 비혼 유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교육이 초혼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우해봉(2009)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 모두 최근의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을 연기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는 개인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출생 코호트별 격차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또한 교육의 효과가 출생 코호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1970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초기에는 결혼을 하는 비율이 낮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혼을 함으로써 교육으로 인해 연기된 결혼을 사후적으로 따라잡기 하는 현상이 남녀 모두에서 관측되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여성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

으로 남아있는 비중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연구 결과는 최근으로 올수록 남성들의 경우 저학력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을 중심으로 결혼을 연기할 뿐만 아니라 생애동안 결혼을 하지 않을 개연성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혼 1인가구를 연구한 김혜영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적 결혼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제도적인 결혼에 대해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보수적인 성의식과 성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에 대한 기대와 가족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고립된 개인 또는 자신의 일이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자로 확일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혼의 진입 가능성이 큰 미혼 20-30대 연령층의 경우에는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교류도 빈번하고, 이성과의 성관계 빈도도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성관계 파트너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독신생활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5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모형제와의 교류도 낮고 이성 파트너가 없는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1인가구의 독신성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성, 연령, 다양한 가족수용도, 자유로운 성의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와 자유로운 성의식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독신성향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독신성향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독신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불안감을 분석하는 모델에 가족주의, 개방적 결혼관, 전통적 성역할의식 등의 성·가족의 식을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2. 독신자 가구의 재정상태 및 노후준비

앞서 제시된 통계에서 결혼적령기의 남성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과 고용불안정이었으며, 여성이 제시한 출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안정이라는 응답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이 독신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이들의 고용 및 경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독신자 가구의 다양한 측면 중 경제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2006~2009년 가계동향조사의 가구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유병규·조호정·전선형(2010)에 따르면, 1인 단독가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1인가구의 소득수준은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전체 가구와의 차이도 확대되면서 빈곤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9년 기준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약 43%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체 가구와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차이는 2006년에 약 156만원에서 2009년에는 170.3만원으로 9%이상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 상에서 전문직 종사자는 줄어들고 단순노무 및 무직군의 1인가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및 기능직에 종사하는 1인가구는 2006년에 비해 7.5% 감소하였고, 단순노무 종사자와 무직의 1인가구는 각각 4.3%, 3.3% 증가하면서 1인가구가 빈곤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별로는 1인가구 중 여성 가구의 비중이 남성 가구의 약 2배에 해당하는데, 2009년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0)에 따르면 1인가구 중 여성 단독가구는 66.4%로 남성의 33.6%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측면에서 볼 때, 고소득층 1인가구 비중은 증가하면서 1인가구 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1인가구 비중은 2006년 56.37%에서 2009년 53.99%로 2.38%감소하였고, 반면 전체 가구에서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으

며, 특히 7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2006년 0.15%에서 0.63%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소비지출은 주거비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식료품과 보건부분의 소비 비중도 전체가구 대비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지출 비중은 20%대로 전체가구의 10%대에 비해 약 2배 수준에 이르며, 보건 등의료비에 대한 지출도 2006년 8.2%에서 2009년 7.6%로 낮아졌으나 전체가구의 지출비중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인 단독가구의 40.8%가 자가에서 거주하며 27.4%는 보증부 월세, 21.9%는 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 비중이 2006년에 비해 7.4% 상승하였다.

비소비지출도 단독가구의 후생 수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비소비지출 비중은 2006년 23.2%에서 2009년 24.6%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국 전체가구에 비해 1.2~2% 높은 수준이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가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지출인 만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1인가구의 전체적인 후생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노인 1인가구의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열악한 상태를 엿볼 수 있는데, 27-56세에 해당하는 비노인 1인가구를 연구한 김혜영(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21만원이었으며, 100-200만원 미만 소득자가 41.8%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도 12.0%를 차지하였다. 이는 통계청(2007)의 「가계동향조사」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366만원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구 소득의 60%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생활비는 174만원으로 150-20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1인가구가 25.8%로 가장 많았고, 50만원-100만원 미만도 13.8%를 차지하였다. 이는 통계청(2007)의 「가계동향조사」 근로자가구 가계지출 283만원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구 지출의 61%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는 20.4%에 불과하였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를 지니고 있는 1인가구는 다양한 이유에서 적극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노후준비의 결과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중고령자 세대의 노후소득에 대한 석상훈(2009)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전의 연령집단에서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으나 60세 이후의 연령집단에서는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사적이전소득과 연금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실질 은퇴연령 이후 연령집단에서는 비동거 가구원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이 되면 사적이전소득은 소득원 구성비의 50%를 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자녀가 없는 독신자 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으므로 연금소득, 자산소득, 근로소득에 의존해야 하며, 노동이 불가능한 연령에 도달해서는 연금과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독신자 단독가구는 일반가구보다 더 많은 연금소득과 자산소득을 마련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표 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1인세대의 국

민연금 가입기간은 부부세대의 세대주보다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기본연금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다. 1인세대의 남성 기본연금액이 31.8만원인 것에 비해, 부부세대의 남성 세대주는 38.3만원을 보였으며, 1인세대의 대졸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이 31.4만원인 반면, 부부세대 세대주는 54.5만원으로 무려 23.1만원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앞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1인세대가 모두 직계존속이 없는 독신자 단독가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통계청(2011)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현재 1인가구 미혼율이 44.5%인 점을 감안한다면, 독신자 단독가구는 국민연금 소득에 있어서도 일반가구에 비하여 훨씬 더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 연금에만 의존할 경우 노후생활 보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개인은 다양한 수단으로 노후준비를 서둘러야 하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함이 많은 연구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3. 독신자 단독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한국사회가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1인가구인

<표 4> 국민연금 수급예정자의 평균 가입기간 및 기본연금액

(단위: 년, 월평균, 만원)

구분	1인세대		부부세대				
	가입기간	기본연금액	세대주		배우자		
			가입기간	기본연금액	가입기간	기본연금액	
성별	남성	16.8	31.8	17.0	38.3	15.6	32.0
	여성	13.7	20.3	15.6	25.8	14.0	20.2
학력	무학	14.6	18.5	12.8	20.8	15.4	25.0
	초졸	14.6	21.3	15.1	27.9	15.2	22.4
	중졸	15.3	26.6	16.3	33.2	13.8	19.9
	고졸	14.4	27.7	17.4	39.6	13.6	22.4
	대졸이상	15.3	31.4	18.7	54.5	13.8	25.5

출처: 석상훈(2009), “우리나라 중고령자 세대의 노후소득 격차 : 국민연금패널을 활용한 분석”,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현재 한국에서 1인가구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적 복지정책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지원이 거의 전부라 볼 수 있다. 저소득층 1인가구를 위한 차별화된 복지정책은 드러나지 않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규모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1인가구에 대한 현행 복지 정책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 현황을 가구구성에 따라 살펴보면, 단독가구가 과반수인 53%를 차지하고 있다(<표 5> 참조).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26-44세 독신자 단독가구의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수급자 중에서 청년기와 중년기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전체의 47%인 점을 감안하고, 1인가구의 구성에서 2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가 넘는 52.7%를 감안할 때, 본 연구의 대상이 된 26-44세 독신의 단독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은 비율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기준 최저생계비인 504,344원 이하인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되는데, 생계급여로 월 335,198원, 주거급여로 86,982원의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 해산급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외에 장애, 자활,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앞서 살펴본 현황과 실태에서 1인가구는 취약계층적 성격이 많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독신자 단독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할 시점임에는 틀림없다.

생활보장 지원처럼 1인가구를 겨냥한 정책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는 취업관련 서비스이다. 정부에서 수행하는 2010년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5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51개(96%), 고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16개(30%)이며, 이 중에는 취업과 고용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14개(26%) 포함되어 있다. 본 조사대상의 거주지역인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사업으로는 경기청년뉴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G-창업프로젝트가 있다. 경기도의 청년 고용 지원 사업 역시 맞춤형 취업지원이라는 점에서는 중앙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의 경우 기업과 지속적으로 연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주안을 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앙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구직자를 해당 대학의 2010년 또는 2011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만 30세 미만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연령제한의 문제점이 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한시적이거나 정규직의 특성을 갖추기 어려운 저임금의 형태이다. 1일 인건비가 33,000~35,000원, 또는 33,000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월소득이 800,000원을 초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G-창업프로젝트의 경우 청년과 조기퇴직자를 대

(표 5) 수급자의 가구구성별 현황(2010)

(단위: 가구, %)

구분	계	단독가구	혈연가구				비혈연가구	기타
			소계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그외가족동거		
가구수	878,799	465,910	390,328	56,623	263,186	70,519	8,712	13,849
구성비	100.0	53.0	44.4	6.4	29.9	8.0	1.0	1.6

자료 : 보건복지부(2011),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도자료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우수한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수 고급인력의 지원으로 한정되는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생계보조를 위한 급여, 취업지원 정책외에 젊은 층의 독신 단독가구가 적용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으로는 저출산 관련 정책이 있다. 결혼을 지원하는 2010년도 중앙부처 결혼장려 관련 정책으로는 1) 건강한 결혼·출산·양육환경 조성사업 2)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3)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교육 강화가 있으며 대부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인식개선을 꾀하고 있다. 건강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사업은 「결혼 전문포털사이트 구축·운영 사업」과 「민간단체 및 종교계를 통한 결혼·출산·양육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 전문포털사이트 구축·운영 사업」은 민간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2010)가 “결혼누리”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및 종교계를 통한 결혼·출산·양육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교육」은 공모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결혼관 및 자녀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비·신혼부부 교육프로그램 및 결혼 준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나 교제 중인 미혼남녀가 참여하여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과 강의, 상담을 통해 원만한 결혼 초기 적응능력 지원 및 신혼부부 갈등을 예방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중앙부처에서는 결혼준비교육 강사풀 구축, 결혼준비교육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결혼준비교육 홍보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교육 강화」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제공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앞서 살펴본 독신자 단독가구의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은 경제적으로 일반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생애를 독신으로 지내게 된다면, 이들은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동시에 은퇴 후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인구 집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독신의 단독가구를 조사하고 분석하되, 경제적인 측면에 주안을 두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이들이 독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저출산의 문제를 가중시키는 독신 단독가구가 이들의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결과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가야할 커다란 방향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살펴보는 독신자 삶의 선택은 내가 원해서 혼자사는 것인지의 여부를 의미하며, 자발적 선택과 비자발적 선택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독신자의 재정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상태는 다양한 변수로 측정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부채와 자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부채에 관해서는 부채 보유 여부, 부채 보유액, 부채보유의 원인을 살펴보고, 자산으로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보유액을 살펴보았다.

셋째, 독신자의 노후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다. 독신자 삶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노후준비를 살펴보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벌어지게 될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대처해야 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경기도에서 단독가구를 이루고 사는 26~44세의 독신자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독신자의 삶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단독가구를 이루고 사는 독신자를 선택한 이유는 결혼 적령기에 도달했거나 지났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모 또는 가족으로부터 분가하여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경우 전형적인 독신자의 삶의 모습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현재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지만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만혼화와 독신의 유형을 보여줄 수 있는 연령으로 제한하였다. 통계청에서는 가임 여성을 15~49세로 설정한다는 점, 2008년도 평균 초혼 연령에 기초한 결혼 적령기가 여성은 26~30세, 남성은 29~33세로 설정된다는 점(통계청, 2008년 혼인통계결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위한 보건복지부(2010)의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서 조사대상을 20~44세로 한정된 점에 기초하였다. 그리하여 조사대상의 연령하한을 결혼적령기가 시작되는 여성의 연령 26세로 두고, 연령상한을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 상한연령이었던 44세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무배우자여야 하며,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생활하는 즉 혼인상태에 있지 아니한 독신의 단독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조사는 2010년 4월 27부터 5월 2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600부 중 570부는 면접조사로 이루어졌고, 온라인 조사는 면접조사에서 사용되어진 동일한 설문지로 동일한 대상자인 경기도에서 단독가구를 이루고 사는 26~44세의 독신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5년도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기초한 1인가구의 정보는 조사 시점인 2010년 4월 현재 인구 이동과 가구 형태의 변화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조사대상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주로 눈덩이 표집 방법에 의존하였으며, 부실 기재되어 응답으로 사용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600부의 설문지를 최종자료로 분석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분석방법

본 설문지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거나 또는 직접 작성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는 <표 6>과 같다.

부모의 결혼생활, 성에 대한 인식, 규칙적인 성관계는 김혜영(2007)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결혼생활은 자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울효과를 고려하여 부모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는지를 질문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음을 의미한다. 성에 대한 인식은 결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사랑 없는 성관계에 대한 하위 3문항으로 성관계의 자유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규칙적인 성관계는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파트너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결혼에 대한 인식, 가족주의에 대한 인식, 성역할 정체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은 보건복지부(2010)의 「2009년 전국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여성가족부(2005)의 「가족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척도를 연구자가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 가족주의에 대한 인식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성역할 정체감은 ‘남자가 할

〈표 6〉 분석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 방법
인구 통계학적 변수	성	남성=0, 여성=1
	연령	세
	교육수준	교육연수
	월평균소득	만원/월
	직업	학생/무직/기타, 전문직/관리직, 준전문가/사무직, 서비스/기능/판매직, 해당=1, 비해당=0
사회심리· 행동적 변수	부모의 결혼생활	부모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셨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은 사랑, 애정, 행복을 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
	가족주의에 대한 인식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가족의 관심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대소사 결정, 가족부양, 가사와 양육에 관한 4문항으로 척도 구성 4-20점, Cronbach's $\alpha = .622$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인 성역할 정체감
	성에 대한 인식	성관계의 자유성에 대한 하위 3문항으로 척도 구성 3-12점, Cronbach's $\alpha = .714$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인 인식
	규칙적인 성관계	해당=1, 비해당=0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허용 정도를 나타내는 하위 7문항으로 구성 7-35점, Cronbach's $\alpha = .623$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다양성을 허용
종속변수	독신 삶의 선택	자발적 선택=1, 비자발적 선택=0

일은 돈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집안의 큰일은 남자가 결정해야 한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다’의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앞의 두 문항은 역코드처리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인 인식으로 해석되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은 한부모, 이혼, 재혼, 무자녀, 1인가구, 동거, 미혼모 가족에 대한 허용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다양성에 허용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신자의 삶의 선택에 대해서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는 남성이 54.5%로 더 많고, 20대 31.8%, 30대 41.8%, 40대 26.3%로 구성되었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42.2%로 가장 많았고, 직업상으로는 사무직의 비율(134명, 22.3%)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관리직(105명, 17.5%), 서비스/판매직(104명, 17.3%), 기계/기능/단순직(82명,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의 지위로 볼 때, 상용근로자가 59.3%로 가장 많았고, 30.3%가 불규칙적인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 평균은 약 185만원으로 나타났는데, 151~200만원 이하가 30.1%

〈표 7〉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327	54.5
	여성	273	45.5
	합계	600	100.0
연령	20대	191	31.8
	30대	251	41.8
	40대	158	26.3
	합계	600	24.7
최종 학력	고졸이하	253	42.2
	전문대졸	134	22.3
	대졸이상	213	35.5
	합계	600	100.0
직업	전문직/관리직	105	17.5
	준전문직/기술직	62	10.3
	사무직	134	22.3
	서비스/판매직	104	17.3
	기계/기능/단순직	82	13.7
	학생	23	3.8
	무직	22	3.7
	기타	68	11.3
	합계	600	100.0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42	7.0
	고용주	19	3.2
	무급가족종사자	1	0.2
	상용근로자	356	59.3
	임시근로자	78	13.0
	일용근로자	56	9.3
	무직	48	8.0
합계	600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93	17.5
	101-150만원 이하	147	27.7
	151-200만원 이하	160	30.1
	201-250만원 이하	64	12.1
	251-300만원 이하	35	6.6
	301만원 이상	32	6.0
합계	531	100.0	
거주 형태	자가	63	10.5
	전세	157	26.2
	월세	246	41.0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32	5.3
	기타	102	17.0
합계	600	100.0	

로 가장 많았고, 101~150만원 이하가 27.7%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경우는 6%에 불과하였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17.5%나 되었다. 거주형태의 경우 자가를 소유한 경우는 10.5%에 불과하였으며, 월세의 경우가 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형태(자가와 전세)를 갖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6.7%를 차지하였다(<표 7> 참조).

2. 독신 삶의 선택

독신의 현재 삶이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61%가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나머지 대상자 39%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혼자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한 비자발적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독신 선택에 대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 자발적인 선택의 경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여성 63.4%, 남성 59%) 통계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연령대가 높은 집단에서 자발적인 선택이 적었다. 교육수준이 4년제 대졸인 집단에서는 무려 70%를 넘는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독신의 삶을 선택하였다.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 각 설명변수들의 고유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 기법 중에 종속변수가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Dichotomous Logit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표 9>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로지스틱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통계값은 66.974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하였으며, 분류의 정확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67%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반응 변수 그룹으로

〈표 8〉 1인가구의 자발적 선택 여부

(단위: 명, %)

구분		내가 원해서 혼자 산다	내가 원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계	χ^2
전 체		366(61.0)	234(39.0)	600(100.0)	-
성별	남성	193(59.0)	134(41.0)	327(100.0)	1.183
	여성	173(63.4)	100(36.6)	273(100.0)	
연령	20대	127(66.5)	64(33.5)	191(100.0)	9.115*
	30대	158(62.9)	93(37.1)	251(100.0)	
	40대	81(51.3)	77(48.7)	158(100.0)	
교육 수준	고졸이하	138(54.5)	115(45.5)	253(100.0)	12.818**
	전문대졸	78(58.2)	56(41.8)	134(100.0)	
	4년제 대졸이상	150(70.4)	63(29.6)	213(100.0)	

*p<.05 **p<.01 ***p<.001

잘 판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사회심리·행동적 변수 중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과 성역할 정체감은 유의수준 $p<.05$ 와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결혼은 사랑과 애정, 그리고 행복을 준다고 느끼는 대상자일수록 독신의 자발적 선택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진보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지닐수록 자발적 선택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진 여성일수록 초혼 연령이 빨랐다는 선행연구(Simon & Marcussen, 1999; 이삼식, 2006에서 재인용)에 기초하여 볼 때, 이른 결혼을 선택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독신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발적 선택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없었던 사실은 다른 모든 조건을 통제된 상태에서 특정 집단의 특정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소 어려운 정책적 함의를 내포한다. 즉 저출산 대책 마련과 같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닌 사회의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

책의 입안과 시행을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선택한 것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지금까지 통상적인 정책을 입안할 때와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저출산과 결혼장려 정책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숙고를 요한다.

성역할 정체감이 진보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지니지 않으며 그 역할의 한계를 구분 짓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독신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독신자가 원하는 노후생활을 살펴보기 위하여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와 같다. 절대 다수가 희망하는 노후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생활이었다. 노후까지 현재의 독신자로 살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자는 14.8%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자도 33.7%나 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나 혼자 노후를 보내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표 9〉 1인가구의 자발적 선택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B	S. E.	Exp(B)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남성)	0.343	0.236	1.410
연령(세)	-0.023	0.018	0.977
교육수준(연수)	0.019	0.055	1.019
월평균소득(만원)	-0.001	0.001	0.999
직업(학생·무직·기타)			
전문직/관리직	-0.705	0.380	0.494
준전문가/사무직	-0.447	0.319	0.640
서비스/기능/판매직	0.201	0.308	1.222
사회심리·행동적 변수			
부모의 결혼생활	0.038	0.097	1.038
결혼에 대한 인식	-0.354 *	0.147	0.702
가족주의에 대한 인식	-0.225	0.119	0.799
성역할 정체감	0.198 ***	0.040	1.219
성에 대한 인식	0.061	0.056	1.063
규칙적인 성관계	-0.181	0.217	0.835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0.039	0.035	0.962
상 수	0.754	1.702	2.126
-2 Log likelihood	642.252		
Chi-square	66.974***		

*p<.05 **p<.01 ***p<.001

〈표 10〉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

(단위: 명, %)

구분	나 혼자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계	χ^2	
전체	89(14.8)	309(51.5)	202(33.7)	600(100.0)	-	
성별	남성	54(16.5)	164(50.2)	109(33.3)	327(100.0)	1.645
	여성	35(12.8)	145(53.1)	93(34.1)	273(100.0)	
연령	20대	14(7.3)	96(50.3)	81(42.4)	191(100.0)	54.667***
	30대	25(10.0)	138(55.0)	88(35.1)	251(100.0)	
	40대	50(31.6)	75(47.5)	33(20.9)	158(100.0)	
교육 수준	고졸이하	46(18.2)	133(52.6)	74(29.2)	253(100.0)	9.989*
	전문대졸	14(10.4)	62(46.3)	58(43.3)	134(100.0)	
	4년제 대졸이상	29(13.6)	114(53.5)	70(32.9)	213(100.0)	

*p<.05 **p<.01 ***p<.001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0대의 경우 10%만이 끝까지 독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지만, 40대에서는 31.6%가 응답하여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짐을 알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의 현실 가능성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에서 비롯되는, 현실의 직시와 체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졸이하의 집단에서는 나 혼자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비율이 18.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이상의 경우는 각각 10.4%와 13.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독신자의 재정상태

독신자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채 보유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현재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38.2%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1.75배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부채 보유가 높게 나타났는데, 40대에서는 과반 수 이상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부채보유 여부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각 집단 내에서 남성,

40대, 고졸이하의 집단에서 부채보유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 총액을 조사하였고, 평균 2,390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이는 통계청(2011)의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서 전체가구의 부채가 4,263만원으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령의 구간이 다르고 표집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본 조사대상자의 주 연령층이 포함되어 있는 30~40세미만의 부채보유 가구 평균이 5,632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채의 액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약 2,847만원의 부채를 소유한 반면, 여성은 1,614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40대의 부채 보유액은 약 3,864만원으로 분포에 있어서도 20~30대의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지는 격차를 보였다. 고졸이하의 부채액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부채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포에 있어서도 중앙값 자체가 다른 집단의 2배 가까이 됨을 알 수 있다.

빛을 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1> 현재 부채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분		현재 부채가 있다	현재 부채가 없다	전체	χ^2
전체		229(38.2)	371(61.8)	600(100.0)	-
성별	남성	146(44.6)	181(55.4)	327(100.0)	12.794***
	여성	83(30.4)	190(69.6)	273(100.0)	
연령	20대	41(21.5)	150(78.5)	191(100.0)	38.768***
	30대	104(41.4)	147(58.6)	251(100.0)	
	40대	84(53.2)	74(46.8)	158(100.0)	
교육 수준	고졸이하	118(46.6)	135(53.4)	253(100.0)	13.733**
	전문대졸	40(29.9)	94(70.1)	134(100.0)	
	4년제 대졸이상	71(33.3)	142(66.7)	213(100.0)	

*p<.05 **p<.01 ***p<.001

〈표 12〉 현재 보유한 부채 총액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값	사분위값		
				25%	50%	75%
전체		2,390	-	550.00	1,000.00	2,600.00
성별	남성	2,846.77(4,310.42)	2.828**	600.00	1,000.00	3,000.00
	여성	1,614.11(1,711.86)		500.00	1,000.00	2,000.00
연령	20대	1,369.74(1,238.05)	9.085***	487.50	1,000.00	2,000.00
	30대	1,760.86(2,505.43)		500.00	1,000.00	2,000.00
	40대	3,863.94(5,132.32)		1,000.00	2,000.00	5,000.00
교육 수준	고졸이하	1,662.74(1,987.23)	3.834*	500.00	1,000.00	2,000.00
	전문대졸	3,171.21(4,094.53)		1,000.00	2,000.00	4,250.00
	4년제 대졸이상	3,017.68(4,790.99)		700.00	1,100.00	3,000.00

*p<.05 **p<.01 ***p<.001

생계비 마련의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25.3%), 카드대금(21.8%), 주택마련(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 빈도 5 이하의 셀이 다수 존재하므로 카이검증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특성을 살펴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택마련, 교육비를 위하여 빚을 지게 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업자금, 카드대금을 위한 빚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생계를 위한 부채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30대에서는 주택마련을 위한 부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40대에서는 사업자금과 카드대금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4년제 대졸이상의 집단에서는 생계를 위한 부채의 비율이 다른 집단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반면 주택마련과 교육비를 위한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졸 집단에서는 사업자금을 위한 부채 비율이 다른 집단의 3~4배 가까이 벌어짐을 알 수 있다.

부채의 사유가 4년제 대졸이상의 집단에서는 내구재와 인적자본의 투자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부채인 반면, 고졸이하의 집단과 전문대졸 집단에서는 생계를 위한 성격이 높은 비중을

〈표 13〉 부채 보유의 원인 (1순위)

(단위: 명, %)

구분		생계비	주택마련	교육비	의료비	사업자금	카드대금	기타	계
전체		58(25.3)	46(20.1)	18(7.9)	5(2.2)	20(8.7)	50(21.8)	32(14.0)	229(100.0)
성별	남성	35(24.0)	24(16.4)	5(3.4)	5(3.4)	15(10.3)	42(28.8)	20(13.7)	146(100.0)
	여성	23(27.7)	22(26.5)	13(15.7)	0(0.0)	5(6.0)	8(9.6)	12(14.5)	83(100.0)
연령	20대	12(29.3)	8(19.5)	13(31.7)	0(0.0)	1(2.4)	5(12.2)	2(4.9)	41(100.0)
	30대	29(27.9)	27(26.0)	4(3.8)	2(1.9)	5(4.8)	21(20.2)	16(15.4)	104(100.0)
	40대	17(20.2)	11(13.1)	1(1.2)	3(3.6)	14(16.7)	24(28.6)	14(16.7)	84(100.0)
교육 수준	고졸이하	35(29.7)	15(12.7)	2(1.7)	4(3.4)	8(6.8)	33(28.0)	21(17.8)	118(100.0)
	전문대졸	12(30.0)	6(15.0)	4(10.0)	0(0.0)	8(20.0)	7(17.5)	3(7.5)	40(100.0)
	4년제 대졸이상	11(15.5)	25(35.2)	12(16.9)	1(1.4)	4(5.6)	10(14.1)	8(11.3)	71(100.0)

〈표 14〉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값	사분위값		
				25%	50%	75%
전체		2,968.4	-	500.00	1,500.00	3,000.00
성별	남성	3,698.21(7,787.49)	1.984*	475.00	1,500.00	3,000.00
	여성	2,347.21(4,379.55)		500.00	1,000.00	2,500.00
연령	20대	1,763.65(3,701.88)	6.562**	300.00	1,000.00	2,000.00
	30대	3,122.83(7,222.40)		500.00	1,500.00	3,000.00
	40대	5,013.77(7,177.44)		500.00	3,000.00	5,100.00
교육 수준	고졸이하	2,807.07(7,376.13)	2.747	300.00	1,000.00	3,000.00
	전문대졸	1,750.84(2,539.97)		300.00	1,000.00	2,000.00
	4년제 대졸이상	3,675.65(6,576.02)		800.00	2,000.00	3,000.00

*p<.05 **p<.01 ***p<.001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14>는 독신자의 금융자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평균 약 2,968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통계청(2011)의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의 저축 평균액이 3,442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임을 알 수 있다. 하위 25%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금융자산은 500만원인 반면, 상위 25%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금융자산은

3,000만원으로 6배의 차이가 벌어지는 분포를 보여준다.

남성의 금융자산은 평균 약 3,698만원이고 여성은 약 2,347만원이었으며, 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많았고, 40대의 경우 하위 25%와 상위 25%의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져, 다른 연령집단보다 그 범위가 훨씬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표 15〉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총액

(단위 :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값	사분위값		
				25%	50%	75%
전체		6,803.31	-	950.00	3,000.00	9,250.00
성별	남성	8,438.65(11,558.61)	3.191**	1,000.00	4,000.00	12,000.00
	여성	4,885.61(7,641.68)		700.00	3,000.00	6,000.00
연령	20대	3,200.57(5,863.78)	21.190***	500.00	1,750.00	4,000.00
	30대	5,957.50(7,323.73)		1,000.00	3,000.00	9,750.00
	40대	12,687.84(14,987.36)		2,000.00	9,000.00	16,250.00
교육 수준	고졸이하	5,814.13(8,729.18)	1.891	1,000.00	3,000.00	7,750.00
	전문대졸	5,700.0(8,928.53)		500.00	2,000.00	7,000.00
	4년제 대졸이상	6,803.31(11,341.84)		1,000.00	4,000.00	10,000.00

*p<.05 **p<.01 ***p<.001

<표 15>는 현재 독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총액을 보여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총액은 평균 약 6,803만원이었고, 부동산 총액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남성의 경우 평균 약 8,439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평균 약 4,886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상위 25%의 부동산 보유액수가 12,000만원에 이르는 반면, 여성은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6,000만원이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 총액은 큰 격차로 증가하였고, 20대에서 30대로, 30대에서 40대로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 총액이 약 2 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의 부동산 보유 액수가 많은 것은 소득의 격차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거니와, 남성은 주로 주택을 장만하고 여성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일반적 결혼 풍습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독신자의 노후준비

<표 16>은 독신자 단독가구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노후생활 준비를 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56.5%이었으며, 준비의 정도는 성과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노후생활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남성이 과반수에 가까운 48.7%인 반면, 여성은 37.4%로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 노후생활 준비 정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 취약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여성들이 노후의 불안을 상대적으로 더 인식하고 있어서 준비에 적극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소득의 증가와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준비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의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국민연

<표 16> 노후생활 준비

(단위: 명, %)

구분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전체	χ^2
전체		261(43.5)	313(52.2)	26(4.3)	600(100.0)	-
성별	남성	159(48.6)	156(47.7)	12(3.7)	327(100.0)	7.809*
	여성	102(37.4)	157(57.5)	14(5.1)	273(100.0)	
연령	20대	93(48.7)	89(46.6)	9(4.7)	191(100.0)	4.008
	30대	104(41.4)	138(55.0)	9(3.6)	251(100.0)	
	40대	64(40.5)	86(54.4)	8(5.1)	158(100.0)	
교육 수준	고졸이하	132(52.2)	111(43.9)	10(4.0)	253(100.0)	28.518***
	전문대졸	64(47.8)	69(51.5)	1(0.7)	134(100.0)	
	4년제 대졸이상	65(30.5)	133(62.4)	15(7.0)	213(100.0)	

*p<.05 **p<.01 ***p<.001

금(29%)이었으며, 예금·적금(17.8%), 개인연금(14.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국민연금의 가입 정도가 높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예금·적금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국민연금의 가입정도는 높아졌으나 예금·적금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국민연금의 가입정도는 감소하였으나, 예금·적금과 개인연금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국민연금은 독립변수의 각 집단 내에서 남성, 40대, 고졸이하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생활을 위한 월평균 저축액을 조사하였고, 결과는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노후 준비금은 약 25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월평균 노후 준비금은 약 20만원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약 30만원으로 나타나 성별 격차가 벌어졌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월평균 노후 준비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이하의 경우 사분위값 50%에 해당하는 중앙값이 2만원에 불과하였지만, 4년제 대졸이상의 집단에서는 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문대졸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노후에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46.8%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노쇠로 인한 육체적 고통’(24.7%), ‘심리적인 어려움’(17.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19> 참조).

이러한 응답은 성별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01),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큰 어려움을 예상한 반

<표 17>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1순위)

(단위: 명, %)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채권 증권	기타	준비 못하고 있음	계	
전체	174 (29.0)	8 (1.3)	87 (14.5)	4 (0.7)	107 (17.8)	11 (1.8)	5 (0.8)	10 (1.7)	194 (32.3)	600 (100.0)	
성별	남성	99 (30.3)	3 (0.9)	44 (13.5)	2 (0.6)	45 (13.8)	5 (1.5)	4 (1.2)	8 (2.4)	117 (35.8)	327 (100.0)
	여성	75 (27.5)	5 (1.8)	43 (15.8)	2 (0.7)	62 (22.7)	6 (2.2)	1 (0.4)	2 (0.7)	77 (28.2)	273 (100.0)
연령	20대	49 (25.7)	4 (2.1)	22 (11.5)	1 (0.5)	40 (20.9)	1 (0.5)	2 (1.0)	2 (1.0)	70 (36.6)	191 (100.0)
	30대	67 (26.7)	4 (1.6)	39 (15.5)	3 (1.2)	46 (18.3)	5 (2.0)	3 (1.2)	4 (1.6)	80 (31.9)	251 (100.0)
	40대	58 (36.7)	0 (0.0)	26 (16.5)	0 (0.0)	21 (13.3)	5 (3.2)	0 (0.0)	4 (2.5)	44 (27.8)	158 (100.0)
교육 수준	고졸이하	79 (31.2)	1 (0.4)	26 (10.3)	2 (0.8)	37 (14.6)	2 (0.8)	2 (0.8)	5 (2.0)	99 (39.1)	253 (100.0)
	전문대졸	39 (29.1)	2 (1.5)	19 (14.2)	0 (0.0)	24 (17.9)	1 (0.7)	1 (0.7)	0 (0.0)	48 (35.8)	134 (100.0)
	4년제 대졸이상	56 (26.3)	5 (2.3)	42 (19.7)	2 (0.9)	46 (21.6)	8 (3.8)	2 (0.9)	5 (2.3)	47 (22.1)	213 (100.0)

〈표 18〉 노후를 위한 한달 저축액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F값	사분위값		
				25%	50%	75%
전체		24.65	-	.00	10.00	50.00
성별	남성	20.26(28.18)	-3.224**	.00	5.00	30.00
	여성	29.67(36.04)		.00	20.00	50.00
연령	20대	22.99(31.31)	.354	.00	8.00	40.00
	30대	25.84(33.94)		.00	10.00	50.00
	40대	24.84(31.38)		.00	10.00	43.75
교육 수준	고졸이하	18.62(27.00)	9.267***	.00	2.00	30.00
	전문대졸	23.03(28.87)		.00	10.00	50.00
	4년제 대졸이상	32.40(38.05)		.00	20.00	50.00

*p<.05 **p<.01 ***p<.001

〈표 19〉 노후에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외로움	노쇠로 인한 육체적 고통	별 문제 없음	계	χ^2
전체		281(46.8)	104(17.3)	148(24.7)	67(11.2)	600(100.0)	-
성별	남성	163(49.8)	45(13.8)	74(22.6)	45(13.8)	327(100.0)	12.226**
	여성	118(43.2)	59(21.6)	74(27.1)	22(8.1)	273(100.0)	
연령	20대	72(37.7)	43(22.5)	52(27.2)	24(12.6)	191(100.0)	10.817
	30대	129(51.4)	37(14.7)	60(23.9)	25(10.0)	251(100.0)	
	40대	80(50.6)	24(15.2)	36(22.8)	18(11.4)	158(100.0)	
교육 수준	고졸이하	133(52.6)	38(15.0)	59(23.3)	23(9.1)	253(100.0)	12.360
	전문대졸	66(49.3)	27(20.1)	28(20.9)	13(9.7)	134(100.0)	
	4년제 대졸이상	82(38.5)	39(18.3)	61(28.6)	31(14.6)	213(100.0)	

*p<.05 **p<.01 ***p<.001

면, 여성은 ‘심리적인 외로움’과 ‘노쇠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응답한 경우가 남성보다 많았다. 또한 ‘별 문제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13.8%)이 여성(8.1%)보다 많았다. 통계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높았고 ‘심리적인 외로움’은 오히려 낮게 나타나 현실적인 생계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됨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및 정책적 제언

앞서 살펴본 현황과 선행연구 고찰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독신자 단독가계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서 각별하게 고려해야 하는 집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안정적 고용

과 주거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 없고, 가족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과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는 집단이다. 이들이 미래에 생계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으로 전락하기 이전에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과 서비스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현황과 결과분석에 기초하여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는 취업과 고용 안정지원 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보장과 제도에서 누락되고 있는 1인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의 재정적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하나로 세금공제 혜택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독신자 지원 가족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1. 취업과 고용 안정 지원

1)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균형에 초점을 두는 지원정책

앞서 살펴본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서 사업의 방향이 교육과 연수 중심의 취업 지원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춤형 취업 정책에 주안을 둔 지원 프로그램이므로, 혜택은 교육과 연수의 차원인 인력 공급에서 머무르지 않고 안정적인 취업, 즉 인력 수요의 차원으로 연계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즉 취업과 고용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통한 취업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임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규일자리로 이동이 가능하고 실업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유용한 정책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이다(전병유, 2010).

따라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200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09년 말 현재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8,423곳 중 9.2%(774곳)가 시행하고 있다. 중고령자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해법으로 제기되는 임금피크제는 노사 모두가 반기고 싶지 않은 불청객임에 틀림없으나, 다가올 고령사회의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보자면, 언젠가는 시작해야 할 임금제도일 것이다. 본 고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 내지 효과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한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의 추진에 따른 정부의 차등적 혜택 지원을 청년층 고용을 통해 가시화시켜야 함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보조금 지급을 하되 임금피크제의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혜택을 주는 차등적인 신규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때 신규 고용 촉진에서는 청년대상의 연령제한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

2) 청년 취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30대 초반~40대 초반 독신자 단독가구 지원

중앙의 사업과 경기도의 사업을 통해 알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취업 지원 사업의 대상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만 30세 이하, 만 33세 이하, 특히 중앙의 인턴지원과 같은 일부 사업의 경우 만 29세 이하로 연령 제한이 있다. 30세 이상부터는 취업 자격의 제한을 받기가 쉽고, 중장년층에도 섞이기 어려운 40대 초반까지는 취업과 관련된 많은 혜택으로부터 제외되기가 쉽다.

따라서 주로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모든 인턴제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의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특별 지급하는 방안이 숙고되어야 한다. 청년인턴은 개인에게는 직장체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로의 진입을 도와주고 기업에게는 해당 기업에 맞는 적절한 인력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잦은 노동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존재한다. 유럽각국이 1990년대 초 중반 이후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은 이들 프로그램이 직업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양희승, 2004; 전병유, 2010에서 재인용). 또한 고용보조금의 경우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의 고용유지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보조금이 단기적으로는 노동수요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높은 사중비용이 종종 문제된 바 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보조금제도는 수요가 일시적으로만 침체된 기업과 장기실업 위험이 높은 근로자로 대상을 잘 정해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핵심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조금제도는 일자리 보존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기업간 근로자 재배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오히려 경기회복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OECD, 2009; 전병유,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고용 불안정과 장기 실업으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30대 초반~40대 초반의 독신자들을 위해서 고용보조금의 특별 지급을 정책화하는 방안과 인턴제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저출산 정책의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

2. 독신자 단독가구의 노후를 위한 세금공제 실시

독신자 단독가구, 즉 1인가구를 하나의 가족 유형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는 아직까지 너무 많은 부족함이 있다. 정부는 보편적 가족을 중심으로 세금 공제를 통해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고, 가족부양을 지원하지만, 어디에서도 독신자 단독가구를 위한 혜택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결과론적으로는 차별만이 남게 된다. 2010년도의 원천징수에 관해 살펴보면,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3조)에 대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한다(동법 제50조).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장애인·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6세 이하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인 경우 각 항목에 따라 1인당 연 50~200만원의 추가공제를 하게 된다. 해당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출산·입양자공제의 항목으로 1인당 연 2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를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없고, 출산과 입양이 없는 1인가구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 모든 항목에서 배우자와 자녀분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셈이다. 또한 특별공제에서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혼인, 장례, 이사비 공제 등이 모두 기본공제의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포괄한 공제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독신자 단독가구는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적어지는 셈이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혜택의 많은 부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부분과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 및 저당 부분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사고, 질병, 기타 어려움으로 인한 위기 시와 노후의 많은 부분을 아직까지도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는 한국사회에서 독신자 단독가구는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단독가구는 기본적인 삶을 위한 주거의 마련, 위기시의 대처, 가족원의 보살핌이 없는 노후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특별히 단독가구의 주거 마련부분과 노후생활 준비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편적인 가족 유형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국가는 지금까지 부양하고 지원해야 하는 가족복지의 많은 부분을 가족에게 의존하여 왔다. 그런데 직계 비속이 없는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의 측면에서 보자면 보편적 가족을 위한 배려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전 가구의 20%를 넘어 이제 5가구당 1가구는 1인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족을 위한 제도에서 1인가구는 가족의 유형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6세 이하의 자녀가 둘 있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의 경우 인적공제 부분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로 5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1인가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연금보험료 공제에서 한도액의 200만원 상향조정, 주택마련 저축과 저당부분 한도액의 200만원 상향조정, 개인연금 저축 불입액의 60%(연간한도 110만원)으로 20%(연간한도 38만원) 상향조정한다면, 총 438만원한도 내에서 상향조정하는 예시를 제시하였다.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1~2015)의 시안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후 생활 지원을 위하여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므로, 현행 베이비 붐 세대의 직후가 되는 현재 조사대상자 인구 집단의 노후를 위해서는 보다 차등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이는 물론 보다 정확한 회계상의 계산이 필요한 절차이겠지만, 단독가구를 가족으로서 배려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들의 노후를 고려하는 제도상의 배려이다. 단독가구는 고령화 대책의 핵심에 들어있어야 하는 사람들로서,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은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다. 저출산을 위한 소득공제의 직접적인 혜택이 있다면, 고령화 사회를 스스로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

한 직접적인 혜택도 함께 있어야 한다.

3.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의 독신자 단독가구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서비스의 대표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 지원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현재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은 크게 취약가족역량강화, 한부모가족지원, 조손가족지원, 미혼모(부)자지원, 청소년한부모지원으로 나뉘어져 진행 중에 있으며, 특별히 독신자 단독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사업의 경우 가족생활주기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에 따른 가족의 이해와 응집에 주안을 두게 되며, 가족친화문화 조성 사업의 경우는 가족단위의 참여 프로그램이므로, 독신자 단독가구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경우 취약계층과 노인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고, 가족기능강화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이는 가족복지, 아동, 청소년, 발달장애 등으로 나누어지고 그 안에 특별히 단독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단독가구는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노후준비의 적극성을 띠는 응답자의 비율이 저조하고, 적절한 주거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도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신자 단독가구의 재무설계는 자녀 및 배우자로 구성된 핵가족의 재무설계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고, 가족생애주기의 적용도 불가능하다. 지금 재무설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가족생애주기는 가족의 형성과 성장, 축소의 단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녀 연령 중심의 생애주기인 셈이다. 따라서 자녀중심으로 소득과 지출

의 흐름을 결정짓고 그 균형을 유지하려는 가족 재무설계와는 그 근본에서부터 출발점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

또한 단독가구에게는 여가와 문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단독가구가 여가와 문화를 즐기기 어려운 이유 중에는 다른 가족 유형들과 유사하게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동반자가 없고 혼자 할 수 있는 활동 및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 단독가구가 큰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고, 동반자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 활동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더불어 단독가구의 고립을 지양하고 사회와의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단독가구 network 구성이 필요하다. 자녀나 배우자를 통한 사회와의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는 단독가구는 쉽게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단독가구의 네트워크 구성은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대상에 단독가구를 포함시켜야 하며, 이들을 위한 재무교육과 여가·문화의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고, network 구성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독신자 단독가구는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서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1)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http://www.nhic.or.kr>
- 2) 김혜영(2007). 1인가구의 비혼 사유와 가족의식. 한국사회학회 2007 후기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대회(II) 자료집, 1041-1057.
- 3)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 김혜원(200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방안 연구.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5) 보건복지부(2010).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10년 7월 인사과 내부자료.
- 6) 보건복지부(2011). 기초노령연금관련 보도자료.
- 7) 보건복지부(2011).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도자료.
- 8) 보건복지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試案) 2011~2015.
- 9) 석상훈(2009). 우리나라 중고령자 세대의 노후 소득 격차 : 국민연금패널을 활용한 분석.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1.
- 10) 심경미(2003). 비혼 여성에 관한 연구 -30대 중반 이후 40대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비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양옥경·이재경·김인숙·윤홍식·송다영·박영희·정순돌·김유순·김신열·이은주·류미란·최명민·이선혜(2007).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서울 : 공동체.
- 12) 여성가족부(2005). 가족실태조사. 서울 : 여성가족부
- 13) 우해봉(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 25-50.
- 14) 유병규·조호정·전선형(2010).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국내 1인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 경제주평, 10(14), 1-15.
- 15)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16) 인구보건복지협회(2010). 내부자료.
- 17) 전병유(2010). 청년고용·실업문제의 해법은 있는가?. 가족여성포럼 자료집. 경기도 : 경

기도가족여성연구원.

- 18) 통계청(1998). 사회조사. <http://www.kosis.kr>
- 19) 통계청(2002). 사회조사. <http://www.kosis.kr>
- 20) 통계청(2007). 가계동향조사. <http://www.kosis.kr>
- 21) 통계청(2008). 사회조사. <http://www.kosis.kr>
- 22) 통계청(2009). 2008년 혼인통계결과.

<http://www.kosis.kr>

- 23) 통계청(2010). 가계동향조사. <http://www.kosis.kr>
- 24) 통계청(2011).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보고서. <http://www.kosis.kr>
- 25)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kosis.kr>

- 투 고 일 : 2011년 9월 30일
- 심 사 일 : 2012년 10월 7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2월 20일